

 금융위원회	<div>보도자료</div>				 대한민국 대전환
	보도	2020.12.29.(화) 10:00	배포	2020.12.29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(02-2100-2510)	담 당 자	김 세 화 사무관 (02-2100-2511)
	경찰청 수사과장 손 제 한(02-3150-2068)		김 태 현 경정 (02-3150-2168)
	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장 김 영 수(031-8008-5010)		정 덕 길 팀장 (031-8008-5090)

제 목 :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◆ '20.12.29(화) 국무회의에서 「대부업법」 개정안 의결 → 국회제출 예정

- 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%(상사법정이율)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 ·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하여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
- ② 정부지원(햇살론 등) ·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거나 무등록 대부영업 · 최고금리 위반시 처벌 강화
- ③ 신종 대부중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

◆ '20.6.23. 발표한 범부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도 차질없이 추진중

- ① 6~11월간 불법사금융업자 4,138명 검거(1~5월 대비 74%↑) · 49명 구속 및 불법사금융광고 27.2만건 · 전화번호 6,663건 적발 · 차단
- ②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변호사 869건 지원 및 맞춤형 서민금융 연계지원 939건 등
- ③ 전용유튜브채널 개설, 대중교통(래핑광고) · 라디오 · 전광판 홍보

1 추진배경

- '20.12.29(화) 국무회의에서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- 이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「불법사금융 근절 방안」의 후속조치로,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2 개정안 주요내용

① 미등록대부업자(→ 불법사금융업자) 명칭변경 (안 제2조)

- (현행)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불법고금리대출·채권추심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,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

⇒ (개선) 등록없이 대부(중개)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(중개)업자에서 불법사금융(중개)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.

②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불법이득 제한 (안 제11조)

- (현행)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, 장기포획, 탈법계약의 형태로 불법·부당이득을 수취하면서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.

※ ① (고금리)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24%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

② (장기포획) 소액대출에서 시작해,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, 최고금리 및 연체가산금리(3%p) 규제를 회피

③ (탈법계약)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구두·모바일메신저로 불법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차주가 계약조건 등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곤란

⇒ (개선)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%(상사법정이율)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·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*,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하도록 하였습니다.

※ '불법사금융업자의 6% 초과 이자 무효화' 효과

- (i)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강화: 반환대상 확대(24% 초과분 → 6% 초과분)
- (ii) 불법사금융업자 처벌강화: 무등록영업 자체에 따른 형벌(벌금·징역 등)과 별개로 최고금리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(6%초과시 위반)하여 형벌 병과 가능
- (iii) 불법업자의 등록을 유도: 등록업자의 경우 24%까지 수취가능

③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(안 제19조 및 제21조)

- **(현행)** 불법사금융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불법행위임에도, 과태료로 처벌(사칭광고)하는 등 처벌이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.
- ⇒ **(개선)** 정부지원(햇살론 등)·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영업·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.

※ ① (사칭광고)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→ **3년 이하 징역**·5천만원 이하 벌금
② (미등록영업) 5년 이하 징역·5천만원 이하 벌금 → 5년 이하 징역·**1억원** 이하 벌금
③ (최고금리 위반) 3년 이하 징역·3천만원 이하 벌금 → 3년 이하 징역·**5천만원** 이하 벌금
* 불법사금융업자(미등록대부업자)의 경우 6% 초과 수취시 최고금리 규제도 위반

④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정의 명확화 (안 제2조)

- **(현행)** “업(業)”이나 “대부중개”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, 사인간 거래와의 구별이나 신종 대부중개행위* 규율에 한계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.
- * **(예시)** 대출중개수수료가 아닌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수취 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계속·반복적으로 영위
- ⇒ **(개선)** “업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실질적인 대부 중개행위까지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*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·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

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(안 제6조 및 제21조)

- **(현행)**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추심권 행사근거인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,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청구를 대부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미흡하였습니다.
- ⇒ **(개선)**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.

※ 보관의무 및 반환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◇ '20.6월말부터 연말까지 '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'을 설정, 매월 1~2회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중

① '20.6~11월 집중단속 결과 4,138명 검거·49명 구속(이전 대비 74% ↑)

-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·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한 결과, 집중단속 이전(1~5월)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% 증가한 총 4,084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하였습니다.
- 지자체(서울·경기) 특사경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을 포함하여 총 54명을 적발·검거하였습니다.

【 주요 단속사례 】

- √ **(서울강동경찰서)** 총 6,300명에게 年 최고 7,217%의 이자로 115억원을 대부하고,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한 미등록대부업 범죄조직 44명 검거(구속 7)(20.10월)
 - 이 중 20만원 대출 후 34일만에 66만원(年 이자율 7,217%)을 받기로 하고, 연체되자 부모에게 강제회수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
- √ **(경기특사경)** '17.7월부터 오산, 천안, 대구 등지에서 일용직 종사자 7명에게 23회에 걸쳐 4,500만 원을 빌려주고 6,570만 원을 편취('20.11월)
 - 이 중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40만원 대출 후 12일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이자율 3,878%의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한 사례 존재

② 온·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.2만건·전화번호 6,663건 적발·차단

-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·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 27.2만건을 적발·차단하였으며,
 - 관련된 전화번호 6,663건도 즉각 이용중지 처리하였습니다.

③ 채무자대리인·소송변호사 869건 및 맞춤형 서민금융 939건 지원

- 불법추심피해 방지·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지원을 위한 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’ 실적은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으로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.

- 또한,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할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
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실적 및 주요사례 】

구분	1~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비고
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	6	18	37	17	41	54	98	121	173	304 ^e	869
	상반기: 78				하반기: 791 ^e (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↑)						

- √ 창원시 거주 A씨는 올 3월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빌림. 매주 16만원씩 총 8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, 한 번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유선으로 욕설·협박을 받았음.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하였음
- √ '18.11월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1달 안에 갚기로 하고 1,200만원을 대출. 선이자 473만원 공제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만원(연이자 780%). B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

④ 유튜브채널 개설 및 대중교통(래핑광고)·라디오·전광판을 통한 홍보

- 불법사금융 예방 전용유튜브채널인 「**불법사금융 그만!**」을 개설, 불법대출 신종수법, 신고·구제방법 등을 한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
(☞ '20.12월 현재 43개 영상 게재 → 누적조회수 36만회 돌파)
- 불법사금융 예방·서민금융 이용을 알리는 지하철(1호선)·버스·택시 래핑광고 및 라디오·전광판 공익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(9~11월).

【 지하철·버스 래핑광고 및 전용유튜브채널("불법사금융 그만") 】



-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·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- 이를 통해,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불법사금융 피해예방! 유튜브 채널 「불법사금융 그만」을 검색하세요!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불법관리청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	---	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